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**천년 전북!**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담당 : 산업경제연구부 김수은 연구위원
(063-280-7133)

보도시점: 2021년 1월 00일(월)부터

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위상 강화해야
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 필요
소상공인정책 기반 강화 및 소상공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제안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시행(2021. 3. 9.)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소상공인정책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는 소상공인을 성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,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정립 및 정책의 독자성 확보,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(2021. 12. 8. 일부개정)되었다.
- 전북연구원(김선기 원장)은 00일 '「소상공인기본법」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'를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위상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.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

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.

- 전북연구원은 소상공인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.
- 첫째,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를 위해 ① 소상공인정책 추진조직 격상(팀 단위→과 단위) ②소상공인실태조사 정례화 ③소상공인정책 심의회 구성을 제안했다.
- 둘째, 소상공인의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를 위해 ①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②소상공인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을 주문했다.
-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수은 연구위원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정은 소상공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·종합화,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인정 및 일관성·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,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넘어 경제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